강기정 광주시장 11억·김영록 전남지사 24억

●공직자 재산 공개

심창욱 시의원 149억 광주·전남 최고 재력가
이동현 도의원 89억·임미란 시의원 48억 신고
문인 북구청장 20억·명현관 해남군수 80억대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억원대, 김영록 전남지사가 24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광주·전남 선출직 공직자 중 최고 재력가는 심창욱 광주시의원으로 149억원을 신고했으며, 이어 이동현 전남도의원(89억원), 명현관 해남군수(80억원), 임미란 광주시의원(48억원)이 뒤를 이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0시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지난해보다 4천400여만원 늘어난 11억3천500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시장은 부인(7억1천500여만원) 명의를 포함한 예금이 8억2천400여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신고한 26억1천만원보다 1억8천만원 감소한 24억3천만원을 신고했다. 김 지사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억4천만원 감소하는 등 전체 재산이 줄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보다 1억100여만원 늘어난 4억500여만원을 신고했고,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3억9천만원을 신고해 지난해 3억7천만원보다 2천만원 늘었다.

광주·전남 광역의원 중 심창욱 시의원이 지난해보다 83억3천600여만원 증가한 149억2천400여만원을 신고해 최고 재력가로 이름을 올렸다. 심 의원은 부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가치가 77억9천600여만원이나 증가했다.

이동현 도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대지, 답, 임야 등 토지 56억원을 포함 총 89억원을 신고해 도의원 중 재산 1위를 기록했다.

임미란 시의원도 13억2천400여만원 증가한 48억6천500여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시의원은 박수기(13억2천800여만원), 심철의(12억3천400여만원), 홍기월(11억8천800여만원), 서용규(10억5천500여만원), 박희율(10억1천700여만원) 의원이다.

도의원 가운데 김정이(45억원4천만원)·최무경(44억6천만원)·강문성(37억9천원) 의원이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광주 5개 구청장의 경우 문인 북구청장이 20억3천1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병규 광산구청장 10억여원, 김병내 남구청장 7억2천200여만원, 김이강 서구청장 4억4천여만원, 임택 동구청장 3억2천여만원 등이다.

전남 22개 시장·군수 중 최고 재력가는 명현관 해남군수로 80억원을 신고했으며 이상익 함평군수가 68억2천만원을 신고해 2위를 기록했다.

김철우 보성군수(25억원), 윤병태 나주시장(23억5천만원), 강종만 영광군수(22억9천만원) 등이 20억원 이상을 신고했으며, 정인화 광양시장(18억원), 김순호 구례군수(10억3천만원), 노관규 순천시장(10억원) 등은 10억원 이상을 신고했다.

이어 정기명 여수시장(9억9천만원), 박홍률 목포시장(8억5천만원), 강진원 강진군수(7억2천만원), 공영민 고흥군수(6억8천만원), 김성 장흥군수(6억3천만원), 이상철 곡성군수(4억6천만원), 박우량 신안군수(3억7천만원), 신우철 완도군수(3억3천만원), 구복규 화순군수(3억원) 등이 3억원 이상을 신고했다.

김희수 진도군수(2억9천만원), 이병노 담양군수(1억6천만원), 김한종 장성군수(1억5천만원), 김산 무안군수(1억5천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4천700만원을 신고해 기초단체장 중 재산이 가장 적었다.

/김재정·박선강 기자

광주경찰 '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개소 광주경찰청은 27일 오전 청사에서 한창훈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했다. 오는 10일 개표 종료 시까지 운영하는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4천여명의 경력을 동원, 선거 관련 우발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운영된다. 〈광주경찰청 제공〉

"민주당 일당 독점 깨고 정치 지형 바꾸겠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총선 승리로 광주 미래 만들 것"

국민의힘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광주시당 7대 공약을 바탕으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광주시당 선대위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광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총선이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를 깨뜨리고 광주의 정치 지형을 바꿔 지역 발전을 가져오는 총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 '시민 눈높이·지역·민생'에 가장 합당한 8명의 후보를 공천했다"며 "광주 8명의 후보와 함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광주시민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친이재명 사람 심기'에만 열중했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광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또 "무엇보다 이 과정에 민주당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잇따라 곳곳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이 같은 불·탈법에 따라 일부 선거구에서 2년 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면 광주는 또 한 번 정치적 망신을 사게 될 뿐"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선대위는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오직 공약과 정책을 내세워 광주의 미래를 제시하는 모범적인 선거를 치르겠다"며 "광주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국민의힘의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광주 선거구 8명의 후보는 28일 오전 6시30분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 앞에서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첫 선거운동 챌린지' 행사를 갖고 광장 주변과 충장로 상가 주변을 청소할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도립대·장흥군·목포대 '서남권 발전' 협약

의과대학 유치 등 공동 대응

전남도립대학교는 27일 "장흥군, 국립목포대학교와 서면으로 전남 서남권 발전 및 지·산·학 협력사업 발굴·기획, 지역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자체-국립대-공립대 3자 서면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 및 의과대학 유치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단지 조성 ▲천연물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및 공동연구 등이다.

협약에 따라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남 서남권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역할 수행 동력이 마련됐다.

전남 전통문화 분야와 연계해 웰니스 관광콘텐츠 개발 등도 추진,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를 활성화해 장흥군과 대학이 지속 공유·협력할 계획이다.

/양시원기자

市, 장애인 자동소변수집장치 지원

광주시는 27일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자동소변수집장치 지원사업을 실시, 오는 4월1일부터 참여자 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최중증 장애인으로, 배변·배뇨 조절 능력 저하로 상시 대소변 흡수 용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행기관인 광주시 남구장애인복지관으로 방문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전남도, 국립 바둑연수원 유치 잰걸음

영암군·한국기원·대한바둑협회와 협약…협력체계 구축

전남도는 2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영암군, (재)한국기원, (사)대한바둑협회와 국립 바둑연수원 유치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와 우승희 영암군수, 강찬원 영암군의회 의장, 한상열 한국기원부총재, 정봉수 대한바둑협회장, 한국바둑의 전설 이창호 프로기사, 한국기원 프로기사 13명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국립 바둑연수원 건립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선정돼 전남지역에 성공적으로 유치되도록 굳건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식에서 한상열 부총재와 정봉수 협회장은 국립바둑원 건립이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전남도와 영암군은 국립 바둑연수원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반영되고 영암군 유치가 확정되면 영암읍 회문리 일원에 국비 450억원을 들여 바둑교육원, 숙박시설 등 바둑 기반시설을 구축해 바둑 대표 지역 브랜딩화와 바둑 특화지역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암군이 진행 중인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고 협약기관들이 공동 협력해 2025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CMYK